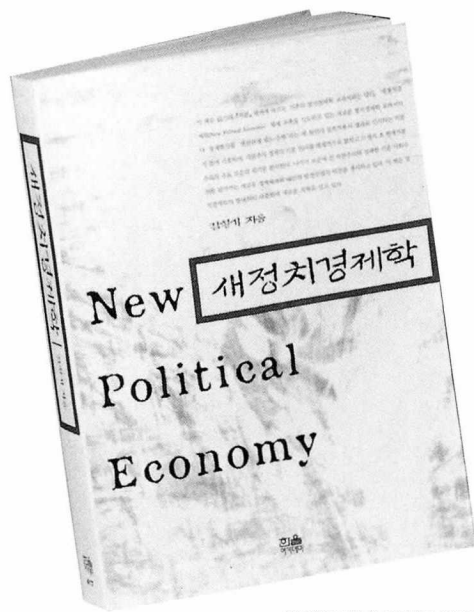


실사구시 정신으로 복원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새정치경제학》 펴낸 김형기 교수



한울/A5변형/618면/20,000원

이 책은 마르크스의 《자본론》 체계에 주석을 단 기존의 정치경제학 교과서와는 달리, 새로운 정치경제학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은이는 경제현상을 ‘생산관계-제도-주체’라는 세 원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인식하는 이론적 틀에 기초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를 체계적으로 밝히고 21세기 초 현대 자본주의의 주요 모순과 위기를 분석하고 있다.

인간은 밥만으로 살 수 없다. 그러나 이 명제는 “밥 없이 살 수 있는 녀석 있으면 나와 보라”는 말 앞에 꼬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동서 고금을 통틀어 ‘먹고사는 문제’를 앞서는 현안은 없었다. 그동안 정치경제학은 이 먹고사는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학문으로 존재해왔다. 자본주의 시대 이래 대다수 사람들을 배고픔에 허덕이게 하는 노동 착취구조와 운명적으로 맞서온 것이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은 ‘자본주의의 승리’로 기록된 구소련과 동구권 붕괴 이후 그 방향을 잃고 표류해왔다. 역사적 사회주의는 어떤 학문적 수사를 통해서도 치유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망가졌다. 노동운동, 계급 소멸, 공동생산체제의 도래를 묘사하고 전망하는 데 유용하게 쓰여온 정치경제학의 종래 분석도구들은 그 용도가 불투명해졌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지식사회와 출판에서도 마르크스주의를 다시 읽자는 분위기가 강하게 일고 있다.

이런 형국에 출간된 김형기 교수(48,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의 《새정치경제학》은 그 의미가 크다. 이 책은 조절이론, 제도경제학, 복잡계이론, 진화경제학 등으로 간신히 명맥을 이어온 정치경제학의 통합과 부활을 선언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시나리오’는 자본주의를 뒤엎는 종래의 ‘혁명이론’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모델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설명하는 새로운 ‘과학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줄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발전모델을 구상하는 ‘수정주의’의 관점에 선다.

“새로운 정치경제학은 우선 ‘지금-여기’를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형성, 국제금융자본의 막강한 지배력,

신자유주의로 인한 노동의 유연화, 지식기반경제의 출현 등 자본주의는 그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더해가고 있거든요. 이 책은 그 현상들을 어떻게 연결짓고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지요.”

‘제도’ ‘인간주체’ ‘생태주의’ 관점 포용해

이런 상황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김교수는 ‘정치경제학 교과서’인 마르크스의 《자본론》 서술체계를 과감하게 벗어났다. 그 대신 경제현상을 ‘생산관계-제도-주체’라는 세 원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인식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관점은 경제현상을 기본적 생산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제도의 작용과 주체의 행위결과로 보고, 자본주의의 시간적 가변성과 공간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프랑스 ‘조절이론’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그동안 정치경제학은 ‘제도’와 ‘주체’를 도외시해왔습니다. 《자본론》 또한 자본의 운동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한 틀을 제공했지만, 제도를 형성하는 주체의 능동성은 별로 말하지 못했죠. 게다가 기존 정치경제학은 체제변혁의 논리에 너무 집중해 자본주의 내의 구조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했습니다.”

이 책은 두가지 면에서 새롭다. 하나는 ‘임노동의 정치경제학’이다. 여기서는 임노동의 재생산 과정을 자세하게 분석했다. 자본의 운동법칙에 종속되는 객체로서 임노동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운동에 대항하는 주체로서 임노동이 강조된다.

또 하나는 ‘생태의 정치경제학’이다. 김교수에 따르면 《자본론》은 인간에 의한 자연의 착취에서 발생하는 생태모순은 해명하지 못한다. 생태의 정치경제학은 자본의 재생산이 노동력의 재생산과 자연의 재생산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정치경제학은 인간과 자연 간의 물질대사에 기초한 원료와

에너지의 변형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자본의 가치증식 욕구의 '무한성' 과 자연적 생산조건의 '유한성' 간의 모순을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으로 인식하고 이 모순으로부터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설명하는 것이다.

“기존의 마르크스주의는 자연을 생산적인 관점에서만 봤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유리하게 자연을 개조하고 가공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치경제학은 이제 생태문제를 꺼안아야 합니다. 수질오염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해환경작업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등의 문제도 중요하게 연구해야 할 과제인 셈이죠.”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학문의 위상 견지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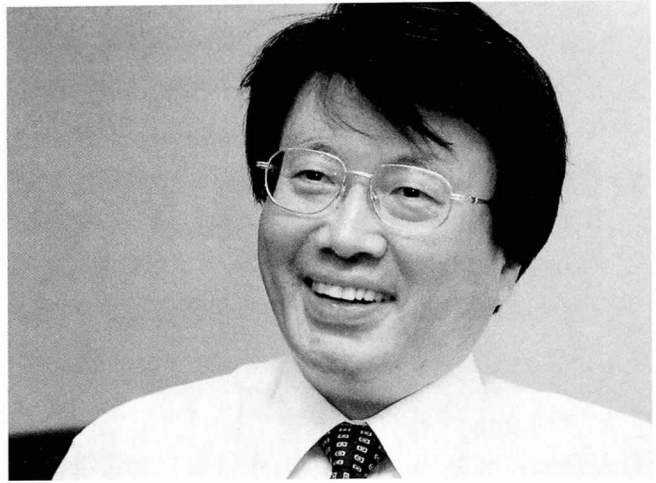
그렇다고 이 책이 기존의 정치경제학 바깥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김교수는 자신의 이론이 여전히 마르크스의 이론을 뼈대 삼아 살을 붙여나간 것이라고 말한다. 정치경제학의 역사적 위치와 그 학문적 기본성격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이 책이 마르크스주의를 심화·확대하고 있는 증좌다.

“정치경제학은 근대경제학에 대립해서 생겨난 학문입니다. 근대경제학은 ‘계급’을 ‘개인’으로 대체하고, 계급간의 이해와 갈등을 개인적 행동의 합리성으로 대신했죠. 현재 근대경제학은 신자유주의의 무차별적 자본증식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학문으로서 정치경제학을 인식하는 것 또한 여전히 중요합니다.”

김교수는 이와 관련해 뜻밖의 이야기를 전한다. 최근 1, 2년 사이에 정치경제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현재 그가 강의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수강생은 4백명이 넘는다. 전공수업인데도 다른 학과 학생이 과반수고, 공대, 의대, 예술대 등 분포도 다양하다고 말한다. 지난해에 경북대를 방문한 프랑스 조절이론가 벤자민 꼬리아 교수도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자 학생들이 정치경제학 강의실을 기웃거리기 시작하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교수는 정치경제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생활에 기초해 이론을 구성하려는 실사구시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특히 마르크스 원리주의자들은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론적 편견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정통’이 없어요. 있지도 않은 정통을 두고 새로운 시도를 단순 비판하고 배척하는 시각이 없어야 합니다. 마르크스 경제학의 통찰력과 강점에 기초하면서 조절이론, 제도학과 경제학, 케인스 경제학 등을 비판적으로 흡수해 자신의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치경제학은 또한 실천적 학문이다. 한갓 이론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김교수는 강조한다. 부익부 빈익빈 사회, 즉 ‘20 대 80’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대안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정책적 차원’의 보완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페레스트로



김형기 교수

이카도 결국 실패했다. 시장을 용납하는 사회주의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중국의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사유재산이 급격히 확산돼 국가 소유 자본이 전체 20%에 불과하죠. 노동시장도 사실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과 기업의 주식투자는 한국을 뺀 정도로 번성하고 있죠.”

자본주의적 모순 극복할 대안 모색해

김교수가 고민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그 또한 현실 자본주의가 도달한 성과 위에 그것을 지양한 형태의 대안

적 체제를 모색하고 있지만, ‘시장 사회주의’의 길을 밟을까봐 걱정이다. 또 대안적 발전모델이 국가 경쟁력에 역효과를 미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으니 이 부분도 난제다. 이 모두를 고려해 김교수는 ‘공동소유하의 개인적 소유’가 실현되는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시스템은 노동자 개인들이 자유로운 공동 의사결정에 기초해 자신들의 공동노동을 통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집단, 즉 비영리단체나 협동조합 등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부방안까지 구체화하진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5일 근무’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도 새로운 경제체제를 앞당기기 위한 관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3년에 걸쳐 2백만개 가량의 일자리를 보존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이윤율과 경쟁력을 해치지도 않았죠. 노동시간 2% 단축이 실제 효과 측면에서는 1% 감소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을 증대시키니까요. 또 일자리를 보존하게 된 사람들로 인해 복지비용이 감소하고, 비용의 분담자가 증대하죠.”

김교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가 빨리 도입돼 한국의 실업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한다.

—강성민 기자